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식**

- ▶ 일시 : 2000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 12시 30분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법무법인 창조

TEL 02-594-2751 FAX 02-588-4415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식**

- ▶ 일시 : 2000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 12시 30분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법무법인 창조

TEL 02-594-2751 FAX 02-588-4415

자 료 순 서

- 결성식 식순 1
- 경과보고 2
- 임원소개 3
- 사업계획 4
- 결성선언문 5

[첨부자료]

1. 신동아 87.9 김대중대통령 기고문 8
2.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 명예회복신청서 18

결 성 식 식 순

사회 : 이기육(집행위원장. 변호사)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경과보고 : 임종인(조직위원장. 변호사)
4. 대회사 : 이창복(공동대표. 국회의원)
5. 격려사 : 박용길(고문. 통일맞이 명예이사장)
6. 강연 '내가 본 한통련 - 한통련의 역사와 활동'
: 요시마츠(吉松) 목사
7. 임원인사
8. 사업계획 발표
9. 결성선언문 낭독
10. 폐회

경과보고

2000. 10. 2 17명의 인사가 모여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이를 추진해 나갈 대책위원회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7인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다.
2000. 10. 11 1차 실무위원회 개최. 5인 내외의 공동대표와 150인 내외의 대책위원을 두기로 하다.
2000. 10. 19 '한통련 명예회복 신청서' 제출
2000. 10. 20 2차 실무위원회 개최. 대책위원회 제안서를 채택하다.
2000. 10. 26 3차 실무위원회 개최.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실무인선을 하다.
2000. 11. 2 4차 실무위원회 개최. 결성식을 12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범무법인 창조'에 두기로 하다.
2000. 11. 9 5차 실무위원회 개최. 사업계획을 논의하다.
2000. 11. 10 강만길 교수, 고영구 변호사, 김승훈 신부, 이창복 의원, 홍근수 목사의 5인으로 공동대표를 확정하다. 또 고문으로 이돈명 변호사, 박용길 장로를 모시기로 하다.
2000. 11. 14 한통련에 결성식 참가를 요청하는 초청장을 발송하다.
2000. 11. 16 6차 실무위원회 개최
2000. 11. 24 7차 실무위원회 개최
2000. 11. 29 8차 실무위원회 개최
2000. 12. 5 현재 150명의 인사들이 대책위원으로 참가

임원소개

■ 고문

박용길(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명예이사장)
이돈명(변호사)

■ 공동대표

강만길(고려대 교수)
고영구(변호사)
김승훈(신부)
이창복(국회의원)
홍근수(목사)

■ 실무위원회

이기욱(집행위원장. 변호사)
임종인(조직위원장. 변호사)
고정호(조직위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사무국장)
김성만(조직위원. 한겨레가족상봉위원회 사무총장)
한홍구(홍보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안영민(홍보위원. 월간 말 기자)
김진국(재정위원장. 변호사)
전해철(재정위부위원장. 변호사)
유한범(사무국장. 반부패국민연대 기획실장)

사업계획

1. 법적대응 등

1) 행정소송

한통련 회원들에 대해 정식여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여권 발급거부 취소 청구소송 제기

2) 국회청원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국회차원의 결의 촉구

3) 청와대 진정서 접수

4) 공동대표와 청와대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 면담추진

2. '재외동포들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회와 학술대회 개최

3. 국내 주요 시민단체의 행사에 한통련 간부 초청

4. 홍보사업

1) 매월 인터넷 소식지 전송

2) 자료집 발간

3) 네티즌 의견조성

4) 캠페인 전개

5. 기타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제반 사업

(김성선인문)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선언서

우리는 오늘 지난 30년간 해외에서 분단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고도 조국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상봉과 왕래의 물꼬를 텃으며, 북한정권의 요인들도 남한을 방문했다. 남과 북의 화해 속에서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신분인 조총련 동포들도 대한민국을 찾았다. 그러나 민단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통련 회원들의 고국방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통련이 지난 30년간 걸어온 길에는 고난에 찬 재일동포의 눈물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일본에서 차별받는 동포들에게 민족주체성을 심어주고 조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해 온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는 1973년 8월에 결성되었다. 한민통의 초대 의장 내정자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한민통의 결성을 며칠 앞두고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자행했고, 한민통은 김대중 구명운동으로 그 활동의 첫발을 내딛지 않을 수 없었다.

1978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민단 인사들로 구성된 한민통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결성된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었다. 이어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을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의 수괴"로 몰아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다시 한번 그를 죽이려 하였고, 이에 한민통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제2차 구명운

진두희 | 김경나

동을 전개했다. 수구세력은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을 한통련과 연결하여 낙선시키기 위해 사진을 조작하는 등 끈질기게 한통련을 몰고 늘어졌다. 조국에서 일본을 방문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재일동포들을 찾아 많은 사람들은 자연히 한통련 회원들을 만났고, 공안당국은 그들을 간첩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처럼 한통련이라는 이름은 수구반동세력에게는 온갖 조작간첩사건을 만들어 내는 요술방망이였다. 조총련 동포들의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지금, 수구세력이 끈질기게 한통련을 몰고늘어지는 것도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의 새 시대로 흐르는 도도한 물줄기를 되돌려보려는 미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은 말한다. 고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한통련을 탈퇴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도대체 한통련 회원들이 무엇을 반성해야한단 말인가? 군사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벌인 것을 반성하란 말인가? 일본에서 온갖 차별에 맞서 민족주체성을 지켜내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투쟁한 것을 반성하란 말인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내기 위해 노력한 것을 반성하란 말인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음습한 밀실에서 애국적 해외동포들과 민주인사를 반국가인사로 낙인찍고 간첩으로 조작한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모의 임종도 가로막고, 유골이 되어 선산에 묻히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은 반인륜적인 고국방문 금지를 일삼아 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해외에서 조국의 민주와 발전을 위하여 외롭게 노력해온 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최근 정부는 애국동포들의 조직인 한민통/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을 제정하여 반독재투쟁을 벌인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독재

와 반독재투쟁이 동시에 기념의 대상이 될 수는 결코 없다고 믿는다. 우리가 정녕 기념해야 할 것은 독재자 박정희가 아니라 유신의 압제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운동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북한과 조총련에게까지 쏘이는 지금, 우리와 같은 국적의 한통련 회원들이 고국을 그리면서도 고국을 찾지 못하는 이 역설에 비통해 하면서, 한통련 회원들이 그토록 살려내기 위해 애썼던 김대중 씨를 수반으로 한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한민통/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취소하고 한통련의 명예를 회복하라!

1.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통련 회원들의 자유로운 고국왕래를 보장하라!

1. 정부는 용공조작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00년 12월 6일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신청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라 한다)은 첫째,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본국의 입장을 철회하고, 둘째, 그 동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셋째, 본국왕래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한통련의 전신 한민통의 결성경위와 의의

-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이라 한다)의 결성은 1973년 8월의 일이지만, 한민통이 결성되기까지는 해방이후 재일교포들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일련의 과정과 전사(前史)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한통련의 전신인 한민통의 역사적 뿌리와 근원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통해, 위 조직의 성격을 규명하는 첫걸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패망 이후, 수백만에 이르는 재일동포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해방된 민족으로서 감격과 기쁨에 가득찬 재일동포들 속에서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는 자치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 해방 후에 최초로 출현한 재일동포 단체는 새조국 건설을 지향하며 재일동포의 귀국문제와 인권옹호를 목적으

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1945년 10월 결성)이었습니다. 이 무렵 본국에서는 한국민주당과 공산당을 양극으로 하는 좌우익 세력의 정치적 대결국면이 점차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었으며, 그 영향이 일본땅에도 미쳤습니다. 그리하여 보수적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조련에 대항하여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건청, 1945년 11월 결성)을 결성하였습니다.

- 1945년 12월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성은 본국의 정치세력들을 이른바 찬탁파와 반탁파의 양 진영으로 갈라놓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좌우익간의 대결은 매우 날카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일동포들 가운데도 신탁통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련을 탈퇴하고 신조선건설동맹(46년 1월 결성)을 결성하였으며, 얼마 지나서는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 46년 10월 결성)으로 재발족하였고, 조련은 이후 조총련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1948년 8월과 9월에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결과, 우리 나라의 분단은 정치적으로 구조화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임시적으로 그어졌던 38도선은 오늘날까지 민족의 분단선으로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이러한 정세 변화는 재일동포단체 간의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대립시켜, 민단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하였고, 조련은 북쪽의 공화국을 지지하는 단체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 한민통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민단」은 해방 후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자치단체였으며, 창립초기에는 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황

이 달라지게 됩니다. 「민단」이 본국정부의 공익단체가 되고, '재외국민등록', '여권발급' 등의 수속 일부를 위탁 받게 되자, 민단의 내부 문제에 대한 이승만정부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진통일을 부르짖으며 독재정치를 펴나가던 이승만 정권의 부분별한 간섭행위는 민단 활동에 심한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본연의 사명(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고수할 것인가, 이승만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민단」 내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 민단 내부의 이와 같은 대립은 4·19 혁명에 의한 이승만 독재정권의 붕괴로 일단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60년 5월에 민단 전체대회에서 채택된 '민단 제3선언'은 본국정부와의 관계에서 앞으로는 "해외동포에 대한 시책 및 대일정책에 대하여 시시비비의 태도를 견지하며,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국헌에 배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부의 태도를 명확히 한다"는 기본입장을 뚜렷이 밝혔습니다.
- 그러나 본국에서 다시 5·16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출현하자 상황은 또다시 달라졌습니다. 민단 내부에 대한 박정희 군사정권의 간섭이 시작되었고, 주일대표부(현재의 주일대사관)를 통하여 공권력으로 민단을 어용화하려는 책동이 공공연하게 강행되었습니다.
- 이런 환경 속에서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에 맞게 민단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양심적인 인사들은 1961년 10월 '민단 정상화유지간담회(유지간담회)'를 조직하고, 그 지도 밑에서 민단의 자주화·민주화와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습니다.

- 이 같은 투쟁은 민단동포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날이 갈수록 주일대표부와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었던 민단 중앙집행부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한일회담이 굴욕적으로 타결되고 한일조약의 체결이 강행된 뒤, 국내외의 반정부기운이 더욱 높아져 가는 속에서 민단 중앙집행부는 민단과 동포들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마치 당연한 일인양 서슴없이 강행하는 주일대표부와 권력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되고,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파국적인 고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주일대표부 측은 어용화된 민단 중앙을 사주하여 민단의 자주화·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민단 도쿄본부와 가나가와본부에 '직할처분'을 내리게 하고,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의 산하단체 자격을 취소시켰으며, 민주적인 간부와 활동가들을 마구 권리정지시키거나 제명하는 등의 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군사독재정권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이후 건설될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근원적 시작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자주화·민주화운동 추진세력은 유지간담회를 기반으로 '민단자주수호위원회'를 새로 조직하고, 민단 어용화 반대투쟁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본국 민중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동포들 사이에 거센 통일운동의 물결을 일게 하였습니다.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민단자주수호위원회, 민단도쿄본부, 한청중앙본부의 공동주최로 7월 7일 7·4 성명을 지지/환영하는 대회가 열렸으며, 이같은 민중대회는 오사카, 요코

하마, 교토, 고베 등 각지에서도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분단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정견과 사상을 초월한 모든 재일동포들이 함께 7·4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대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 7·23 공동대회가 끝난 후,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온 유시간담회 소속의 민주인사 50여명은 민단도쿄본부에 모여 발전하는 정세에 맞추어 7·4 공동성명에 근거한 조국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조국통일운동을 추진할 모체를 조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 준비를 위한 발기위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72년 8월 20일 도쿄에서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협"이라 한다)의 결성대회가 열렸습니다. 민통협은 남북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여 그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고 민족주체성을 견지하며,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달성하고, 사상과 이념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며, 국내외의 모든 동포들의 총력을 조국통일대열에 결집시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민들과 친선을 도모한다는 등 다섯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민통협의 건설은 재일한국인들의 민족통일운동이 「민단」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전민족적인 시야에서 전개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민통협이 결성되어 활동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국에서는 매우 엄혹한 정치적 사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미 1960년대 말에 3선개헌을 조작하고, 1971년에는 그에 기초한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선 독재자 박정희는, 이번에는 '조국의 통일을 촉진시킨

다'는 명분으로 1972년 10월 유신정변을 단행하여 일인영구독재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기만적인 책동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른바 6·23 특별성명을 통하여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유린하고 조국의 영구분단을 공식적으로 정책화했던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유신독재 밑에서 인간 고유의 권리를 빼앗긴 채 굴종을 강요당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사회활동가·지식인·청년·학생들은 체포되어 감옥으로 보내지고, 민족통일운동은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세는 일인독재를 징계하고 민주민권을 되찾으며 민족의 영구분단을 막고 통일조국의 새역사를 열기 위하여 국민의 쫓겨난 권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러한 투쟁을 이끌어 나갈 지도조직 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 민통협에 망라된 유시간담회 성원을 중심으로 한 재일민주인사들의 의사도 한결같았습니다. 때마침 1971년의 대통령선거의 부정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박정희에게 정치적·도덕적으로 대타격을 가하고 민주진영의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한 김대중씨(현 대통령)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재일민주운동의 대표자들과 김대중 대통령은 서로 손잡고 해외에서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과 그 운동을 지도할 조직으로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이라 한다)』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반독재 타도하고 민주회복 전취하자', '해외동포 단결하여 국내동포 구출하자', '일본은 독재정권을 지원하지 말라'는 등의 투쟁구호도 마련되었는데, 이 구호들은 한민통 결성 후의 활동지침이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한민통의 결성을 몇 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에 의하여 납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일민주운동가들은 난국을 뚫고 나갈 비장한 각오로 김대중 대통령 구출 운동을 펴는 한편, 예정대로 8월 13일에 발기인대회, 15일에 결성선언대회를 열고 한민통의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민통의 발족은 북미주와 유럽 등 세계 각지역 동포들 속에서 본국의 군사독재 정권 반대와 재외동포들의 권익 수호를 위한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 요컨대, 한민통은 조총련과는 그 뿌리를 달리하는 '민단'에서부터 그 근원을 가지는 조직으로서, 7·4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조국의 평화적·자주적 통일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과, 반독재민주화투쟁과 재일동포들의 권익 수호를 위해 창설된 단체입니다. 이러한 한민통의 결성은 해외동포운동 및 한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발전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한민통이 결성됨으로서 재일동포들은 종래의 체제 내의 부분적이고 국한적이며 분산적인 운동을 지양하고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의 민주애국역량으로 굳게 뭉쳐 반독재민주화운동을 벌여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일동포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이며 발전입니다. 또한 한민통의 결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신체제의 선포 후 비록 해외에서의 활동이지만, 유신독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합법적 조직이 탄생되고 억압받는 한국민중이 반유신민주화운동의 개시를 내외에 선언한 것으로 의미됩니다. 실제로 한민통의 결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민의 반유신민주화투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당시 국내 민중들은 침묵을 강요당하여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펜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반유신민주화운동에 있어서 그 시작은 해외동포들이 맡아야 하였던 것입니다. 한민통의 결성은 바로 조국의 잘

못된 정치상황 - 유신독재 - 에 맞서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한민통의 결성 이후 국내외의 반유신민주화 투쟁은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어 급속도로 발전되어 나갔고, 해외에서의 투쟁도 일본은 물론, 전세계적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2. 한민통의 활동

가. 반유신·반독재 민주화운동 (김대중대통령 구출운동)

- 대한민국의 민주화 실현과 조국통일의 촉진은 한민통 결성 이래 일관한 운동목표이며 운동내용이었지만, 출범초기에 한민통은 반독재민주화투쟁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민통의 반유신독재투쟁 전개는 김대중대통령 구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민통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김대중대통령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당한 채 결성대회를 갖게 된 상황 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당시 민주화의 상징으로 의미지워졌던 김대중대통령의 구출은 본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납치사건이 발생한 직후, 한민통 결성 준비위원들은 김대중선생구출대책위원회(이하 "구대위"라 한다)를 재빨리 구성하고, 8월 15일 '김대중 선생 납치규탄 재일한국인민중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김대중대통령의 원상회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개시하였습니다. 한민통의 김대중대통령 구출운동은 세계 각지역의 해외동포들은 물론,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족적 실체를 날달이 드러내어 그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 그러나, 본국의 상황은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장준하 씨 등 국내민주인사들에 의해 추진된 '민주헌법 백만인서

명 청원운동'을 1·8조치 가동을 통해 탄압하고, 일본정부에 재일한국인 민주단체에 대한 단속과 탄압을 요청하는 등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 정권의 폭압통치 밑에서도 본국민중의 반유신독재투쟁은 줄기차게 전개되었으며, 1974년 말에 이르러서는 반독재세력을 총망라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되고 '국민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같은 정세 발전에 대응하여 한민통은 매년 성명서와 항의문 발표, 민중대회와 가두시위 등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을 규탄하고 본국민중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한편, 한국민의 투쟁에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적 연대활동을 벌였습니다.

- 이러한 여러 형태의 활동을 벌이던 중, 1976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쿄에서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해 한민통의 활동이 거둔 가장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국제회의에는 16개국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한국민중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 결국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본국 민중과 함께 한민통이 벌여 온 민주통일운동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김대중 대통령 2차 구출운동

- 10·26사건으로 유신독재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신잔당의 청산과 민주화를 담보하는 개헌운동이 요원의 불길같이 타올랐고, 유신정권은 1980년 2월 말경 김대중 현 대통령 등 민주인사 687명에 복권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김대중 현 대통령은 7년만에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 이로써 한민통은 구출운동의 1차적 목표는 일단 달성하였다고 판단하고, 1980년 3월에 '김대중 선생구출위원회'를 해산하고 모든 힘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2개월도 채 못 가서 5·17쿠데타로 김대중 대통령은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함께 다시 구속되어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죄명'은 '내란음모 및 국보법 반공법 계엄포고령 위반'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일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말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민통은 위급한 사태에 직면하여 해산했던 구출위원회를 부활시켜 다시 김대중 대통령 구출운동을 벌였습니다.
- 한민통은 김대중 대통령을 말살하려는 신군부의 흉악한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는 홍보활동을 1차 구출운동에 이어 정력적으로 벌였습니다. 한민통은 우선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조작한 '김대중 일파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문'의 허위성을 폭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광범한 인사들의 의분을 불러일으켜 「김대중 구출」을 위한 운동단체를 일본 주요 도시를 비롯하여 세계각지에 수많이 조직하도록 하였습니다.
- 김대중 구출에 대한 국제여론과 행동전선을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하여 여권을 거절 당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법무성의 재입국 허가증만으로 해외로 뛰어나가 세계적 범위에서 구출운동을 직접 벌였습니다.

- 한민통 상임고문이며 한민련의 공동의장인 배동호 선생은 유인상 한민련 유럽의장과 임민식 한민련 국제국장 등과 함께 1980년 6월 12-13일 양일에 걸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사회주의인터 간사회'(의장 빌리 브란트 서독 사민당 당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간사회에는 31개국의 사민당 대표와 42개의 정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었는데, 배동호 한민통 상임고문은 특별연설을 통하여 10·26사태 이후에 전두환 일당이 감행한 11·11사태를 비롯하여 5·17 계엄령확대 조치와 함께 김대중 현 대통령 등 민주인사들을 구속하여 말살을 획책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광주민중대학살 만행의 실태를 자세히 보고하여 민주화와 김대중 현 대통령 구출을 위해 싸우는 한민통·한민련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한민련·한통련 대표단은 귀로에 미국 워싱턴에 들러 마첸디 미국무성 한국 담당관, 케네디 상원의원 보좌관, 프레이저 전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비롯한 많은 미국 정계인사들을 만나 김대중 현 대통령의 구출에 대한 협조와 미국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의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현 대통령 구출을 호소하는 한통련의 활동은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 또한, 1976년에 이어 1980년 7월말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불과 2개월간에 「김대중구출 100만 인의 서명」 모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군법회의에서 1심 판결대로 사형이 선고된 데에 항의하여 '사형판결 규탄 11·8한일연대긴급집회'를 개최하고 그간 모았던 일본국회청원 서명부를 일본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한민통과 구출위는 80년 8월 13~15일까지 일

본 도쿄에서 '김대중 선생구출과 한국민주화를 위한 긴급 해외한국인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김대중 현 대통령 구출운동을 국제적으로 폭넓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 '김대중 선생구출 해외한국인연락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일본 미주 유럽 등 8개국에 100여 명의 한국인 민주인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김대중 선생 구출 해외한국인연락협의회가 결성됨으로써 구출운동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세계각지에서 현지 외국인 민주인사들을 묶어 구출운동에 나서게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김대중씨 등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한민통은 재판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구출운동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쿄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스키야바시공원'에서 연거푸 3번이나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80년 12월 4일부터 돌입한 무기한 단식투쟁은 일본시민들 속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일본사회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저명한 학자 문화인 시민운동 활동가들 연 500여 명이 현장을 찾아와 격려해 주며 함께 싸워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대법원이 김대중씨의 사형을 확정하는 언도를 내린 후, 국무회의에서 무기형으로 감형조치를 결정한 다음에도 한민통은 김대중씨가 미국으로 '추방'될 때까지 그의 석방을 위해 국제회의, 대중집회, 가두홍보, 김대중씨의 옥중편지 소개, 음악회, 회화전, 미국정부에 편지 보내기 운동 등을 즐기치게 벌였습니다.

다. 전두환 정권 시절의 반독재민주화투쟁

- 12·12 쿠데타 이후 출범한 전두환정권은 이전의 박정희 정권을 훨씬 능가하는 무지막지한 군사독재정권이었습니다. 한민통은 본국 민중의 뜻을 대변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의 죄상을 세계에 고발하고 단죄하는 활동을 각방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한민통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의 투쟁모습과 탄압군의 포학무도한 살인 만행의 현장을 녹화한 자료들을 모아 영화 '한국 1980년 - 피의 항쟁'을 제작, 6월 10일부터 일본 각지에서 상영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광주에서 저지른 전두환 일파의 죄상을 재일동포들과 일본인에게 광범위하게 선전·확인 시켰습니다.
- 이후 1981년 2월에 개최된 한민통 제9차 중앙위원회는 전두환 체제를 '군사파쇼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규모로 반전두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반독재투쟁을 벌이는 것을 기본 운동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위의 결정 하에 81년 5월 도쿄에서 3일간에 걸쳐 열린 '한국민주화지원 긴급세계대회'는 해외동포운동이 이루어 낸 참으로 큰 성과였습니다. 광주민중항쟁 1주기를 맞아 열린 이 국제회의에서는 세계의 27개국과 3개 국제기관에서 연1600여명의 참가하였으며, 음악회·회화전·대중 집회 등으로 일본 전역을 광주의 함성으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이 국제회의를 통해 전두환 정권의 죄상은 전세계에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이같은 국제회의는 1982년 5월과 1983년 5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한민통이 해외에서 벌인 반독재운동은 세계 각지역의 해외동포들 사이에 널리 파급되었으며, 본국 민주세력의 반전두환투쟁도 점차 고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3년 5월에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씨의 전두환 정권의 파쇼폭압에 항거하여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였고,

8월 13일에는 미국으로 강제추방되었던 김대중씨와 김영삼씨 공동명의로 특별성명이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한민통은 그때마다 본국 민주인사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김영삼씨의 단식투쟁에 연대하여 한민통 간부들은 도쿄에서 단식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 1984년에서 1986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에서는 민중민주 운동협의회 등 수많은 민주단체들이 출현하고 남북적십자간 구원물자 인도·인수작업, 예술단과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대화 모색의 움직임이 표면화되는 한편, 반대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신민당과 분익환 목사 등 민주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병행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민통은 86년 3·1절 67주년, 4월혁명 26주년, 광주민중항쟁 6주년 등을 계기로 '민주제개헌쟁취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 재일한국인권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국의 민주화투쟁과 발맞추어 일본에서의 본국민주화투쟁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 1987년 호헌철폐와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본국에서의 민주화투쟁을 극에 달하고 있을 당시, 한민통 역시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애국역량을 총동원하여 군중집회와 시위투쟁 등 본국민중들의 투쟁에 합세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다. 소결

한민통의 활동을 크게 나누자면, 하나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본국민주화투쟁과, 김대중대통령 납치에 대응한 구출투쟁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본국에서

그때 그때의 정세와 조건에 따라 전개되던 민주화투쟁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본국에서 발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외에서의 선도적 발언을 통해 본국의 투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은 물론, 세계 여론을 한국민주화에 주목하게 하는 활동들을 펼쳐왔던 것이며, 그 커다란 축을 차지하고 있던 김대중대통령 납치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싸웠던 것입니다.

3.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된 경위와 과정

- 한민통은 지난 1978년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81. 1. 23 선고 80도2756호)을 통해 반국가단체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실 문제가 되었던 당사자인 김정사씨는 한민통의 회원도 아니었을뿐더러, 한민통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고무·찬양할 목적으로 일본에서의 반정부활동을 펼쳐왔던 것도 위 한민통의 역사에서 드러나듯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몇 차례의 대법원 판결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한통련은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89. 2. 12.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90. 9. 11. 선고 90도1333 판결, 1990. 10. 12 선고 90도1744 판결,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그러나, 이는 1978년 당시의 엄혹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잘못 내려진 반국가단체라는 선고를 그대로 추종한 것으로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근거와 관련하여 당시 검찰의 한 공안관계자는 “한민통의 조직자체가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고, 당시 한민통 의장 등 구성원의 성분이 북괴에 가서 지령을 받은 공작원이거나 조총련의 조종을 받은 자들이며, 공작금도 김일성의 직접지시에 의

해 거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활동면에서도 각종 반한규탄대회 등에 공공연히 조총련과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의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이상 동아일보 1978년 6월 20일 기사 중 일부 발췌)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크게 세 가지(북한의 지령에 의한 조직구성, 북한의 활동자금지원, 한통련의 활동)로 나누어지는 위의 근거들은 실제로 무고한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힘을 통해 그 반국가단체 선고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한민통이 북괴의 지령에 의해 건설된 조직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 한민통은 민단 유지들의 자주적 의사와 결심에 따라 창립된 재일한국교포들의 민주·통일운동단체입니다.
- 한민통은 유신독재에 의해 민주·민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던 엄혹한 때인 1973년 8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민주회복과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성취할 목적으로 70명의 발기인으로서 창립되어 그 이틀 후인 8월 15일 도쿄 히비야 공회당에서 창립선포대회를 가짐으로서 정식 발족을 보게 됩니다.
- 한민통의 창립을 준비해온 70여명의 발기인들 중에는 민단 중앙단장·의장직을 역임한 민단의 원로들과 현직교문들, 그리고 민단동경과 대한부인회 동경, 재일한국청년동맹중앙본부와 각현 본부 현직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전원 민단(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의 단원들이며 조총련 동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이는 당시의 발기인 명단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서 한민통은 조총련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른 조작된 말이며, 이는 한민통의 결성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45년 발족하여 조총련의 전신이 되었던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노선에 찬성하지 않는 민주인사들이 구성한 조직체가 바로 민단임을 볼 때, 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 또한 현 김대중대통령 (『신동아』 87년 6월 호 275호)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서 그러한 점은 더욱 명확해 집니다.

“나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 반유신 민주화의 거절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73년 6월에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라는 조직을 미국에서 결성하였다. 똑같은 조직의 동경본부를 만들기 위해 나는 73년 7월에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에서 내가 만나고 협의한 사람들은 8대 국회의원이었으며 지금은 작고하고 없는 김재화씨와 나의 오랜 친구인 김종중씨, 그리고 배동호, 조환준씨 등이었다. 그들은 그 당시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상황을 걱정하며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던 인사들이었다. 다만 그들이 박정권의 유신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단 내에서는 비주류의 위치에 처해 있었으나 사상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민통 동경본부를 결성함에 즈음하여 나는 세가지의 조직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다.

첫째는 대한민국 절대지지, 둘째는 선민주회복 후 통일, 셋째 조총련과는 연계하지 (필자주: 이 부분은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

에 부연하던 조총련과의 7·4 남북공동성명지대회를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음)말 것 등이다. …중략… 그러면서 나는 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지 않으며 손을 끊겠다고 통고했다. 결국 그들은 내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해서 일본에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가 결성되게 되었는데 결성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는 납치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 한민통의 활동자금은 북한과 조총련의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 한민통의 활동자금은 민단동포유지들의 성금과 회원들의 회비였습니다. 이는 한민통의 결성 당시부터 1994년 한통련 현행규약 개정시까지 계속해서 명시되었던 ‘회원의 회비납부의무’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 이러한 회원들의 회비 이외의 활동자금의 출처는 재일 민단교포들의 성금입니다. 한통련이 기부자들의 명단을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거의 모두가 현재까지도 본국을 내왕하는 기업가들로서 만일 이름이 밝혀질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때문입니다. 본국의 예를 보더라도 기업가들의 야당과 운동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때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민통/한통련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민통/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의 철회와 자유로운 양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때에는 재외 민주·통일 운동에 기여한 그들의 공로를 온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다. 조총련 등과 공동의 사업을 펼쳐왔다는 점.

- 조총련 등과의 공동 사업 진행이 문제가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다름아닌 한민통의 운동노선을 과연 무엇으로 볼 것인가, 내지는 한민통의 운동노선이 북한의 적화통일노선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가 등이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먼저 한민통의 운동목적과 운동노선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창립대회에서 채택한 「발기선언문」과 「정강정책」 및 활동내용을 분석·검토하여 판단내려야 합니다.
- 먼저 한민통의 발기선언문에서 밝힌 목적과 운동노선은 민족자결과 민주수호, 통일·구국입니다. 이에 관하여 발기선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 민주수호에 대하여 : 「우리가 갖은 불행이 겹쳐지고 고통이 극에 달한 이 숨막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현 유신체제를 타파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실공히 주체가 되고 국민이 위임한 당해기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엄정히 분립되는 민주헌정의 확립, 바로 여기에 민권을 되찾은 途가 있고, 사회정의 실현하는 理가 있다. 또한 그것이 곧 민족통일과 국가번영의 지름길이다」
 - 민족자결에 대하여 : 「한민통은 열강들의 농간에서 조국을 지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는 겨레의 자랑 찬 양심이 될 것이며 민족의 영구분

열을 막고 통일조국의 새 역사를 앞당기는 구국의 전위대가 될 것이다.」

○ 민족통일에 대하여 : 「통일에 미명하에 분열을 추구하는 현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통일의 대통로를 개척하자! 독재체제가 소탕되고 민주헌정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북의 공산주의들과도 민족적 화해를 이룩할 수 있으며 5천만 남북의 겨레들은 주저없이 얼싸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 한반도의 남북간에는 문자 그대로 사상,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이 이룩될 것이며 조국 3천리금수강산은 적화도 아니고 승공도 아닌 중립민주의 공정한 기치 하에 역사적인 대통합을 보게 될 것이다.」

- 위와 같은 것이 한민통의 주장입니다. 한민통은 발기선언문에서 천명한 운동노선에 따라 한국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한민통은 10주년을 맞아 제2선언을 채택하였는바, 그 내용은 창립당시의 민족자결, 민주회복, 통일구국의 3대 과업을 자주·민주·통일로 재정립한 것이고, 한통련 결성 당시의 강령 또한 이러한 맥락에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민통이 창립당시 발기선언문에서 밝힌 민족자결, 민주회복, 통일구국의 3대 과업과 제2선언의 3대 과업은 본국 민주세력의 운동목표 및 이념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며 그 내용의 어느 부분에도 「공산주의 운동」이나 「반국가 행위」로 비난받아야 할 점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한민통이 창립 이래 지난 15년간에 걸쳐 일관하게 주장한 민족의 자주권수호, 민주주의확립, 자주적 민족통일 등의 3대 과업과 운동노선이 「반국가 행동」이라고

한다면 멀리는 8·15 이후부터 가깝게는 1970~80년대의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을 모두 다 「반국가행위」로 규정해야 하는 역사적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라. 소결.

- 위의 사실들을 볼 때, 한민통/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판시'는 해외에서 반독재민주화투쟁의 확산에 당황한 독재정권이 한민통을 파괴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말살하기 위한 음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1978년의 한민통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한통련의 결성 경위와 과정 및 노태우정권 하 주요활동

- 1989년 2월에 개최된 한민통 제15차 확대중앙위원회는 결성 후 16년간의 활동을 총괄하고, 한민통을 한통련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뒤이어 선언과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새 집행부를 선출하였습니다.
- 한민통을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1988년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세의 흐름 속에서 거론되어 충분히 논의되어 온 결정이었습니다. 한민통의 발전적 개편을 요청한 정세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본국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비약적으로 성장·강화된 사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오던 민주운동이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이르는 동안 포화한 군사독재와의 대결 속에서 부단히 역량을 축적하여, 6공정권이 출현한 시점에서는 나름의 커다란 운동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성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1989년 1월에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라 약칭함)」과 1987년 6월 항쟁 이후 건설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이라 약칭함)」이었습니다. 한민통의 한통련으로의 조직개편은 바로 "본국 민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자주·민주·통일의 새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해 조직개편을 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통련의 규약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1974년 9월 21일 당시 한민통의 규약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중앙상임위원회와 지도위원회, 지역본부 등의 내용들이 1983년 한민통 규약에서는 추가되었는데, 사실 중앙상임위원회와 지도위원회, 지역본부 등의 구성은 '회의'라는 느슨한 체계로서는 담보하기 어려운 조직형태입니다. 하기에 한통련으로 발전적인 조직개편을 꾀하며 위 기관들의 구성 근거를 '연합'이라는 좀 더 통합적인 조직구성을 통해 명확히 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1994년 개정된 한통련 규약에서 대의원대회를 새로이 규정하는 등, 한민통에서 한통련으로의 조직개편은 좀 더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요구된 것이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 즉, 한통련의 발족은 본국 민주화운동이 무르익어가면서, 그러한 흐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해외에서의 민주화투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한민통의 운영을 좀 더 민주적이고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한통련이 발족한 첫해인 1989년에 전개된 활동에서 주된 것은 노태우 정권이 조성해 놓은 공안정국을 짓부수면서

민간주도의 남북간 자주교류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집권당국의 남북대화과 교류의 '창구단일 정책'의 철폐를 요구하고 자주적 민간교류를 주장해 온 민족민주세력은 그것을 실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1989년 봄, 전민련 고문 문익환 목사의 평양방문과 그해 여름 전대협 대표 임수경 양의 평양축전 참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한통련은 노태우 정권의 용공조작과 한통련에 대한 비방중상을 규탄하고,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와 같은 애국인사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봄과 여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1990년은 국내외의 민족민주세력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그것을 성사시킨 뜻깊은 해였습니다. 한통련은 해외에서도 적극 호응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여 재일민주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90년 3월에 '범민족대회 일본지역추진본부'를 결성한데 이어, 4월에는 '해외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전민련이 몇차례나 시도한 북한대표와의 판문점 예비접촉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노태우 정권의 탄압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요컨대, 노태우 정권 들어 펼쳐진 한통련의 활동은 이전 시기를 통해 축적된 국내외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군사독재정권의 민주세력 탄압에 맞서는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운동 촉진에 그 초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5. 김영삼정부에 대한 한통련의 기본입장과 활동

-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정권은 종전의 역대 군사정권과는 다른 개혁정책을 내놓았습니다. 4월에 개최된 한통련 제5차 중앙위원회는 문민정부의 출현을 4.19 이래 줄기차게 전개돼 온 민주화투쟁의 결실로 평가하고, 개혁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통련은 문민정부에 대해 개혁정치를 중단없이 추진하며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민족우선주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요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통련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문민시대에 맞게 민족자주권의 확립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 남북합의서 이행, 군부 통치의 잔재청산과 민주대개혁의 실현 등을 촉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운동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6. 김대중 정부에 대한 한통련의 기본입장과 운동방향

가. 김대중 정부에 대한 한통련의 기본입장

- 한통련은 지난 1998년 3월 1일, 한통련에서 발행하는 재일교포 신문인 「민족시보」를 통해 “김대중 정권 출범에 즈음하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주장을 실은 바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한통련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의 닳을 올렸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야당정권의 탄생이다. 김대중 정권이 50년만의 정권교체의 의미를 살려 나가려면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자주 자존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기필코 열어 나가야 한다”며, “새 정권 앞에서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리고 남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고 보도하는 한편,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면서 인기
에 구애되지 말고 잘못을 바로 잡는 대변혁을 과감히 추
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통해, 새로운 정부
에 거는 한통련의 커다란 기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 특히 새로운 세기를 앞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관
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
적이고 반민족적인 남북대결정책을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며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간절
한 바람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한통련은 이러한 남북관
계의 원칙으로 “조국통일의 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에
서 밝힌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다. 이 3
대 원칙이 재확인되면 통일방안은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며 남북 상호간의 신뢰획득이 전제될 때만이, 이
후 원만한 남북관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
남북 당사자에 근거한 평화통일이 한통련의 통일노선임
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한통련은 민족주체성 확립의 관점에서 교육과
언론 부분의 개혁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
장과 함께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20세기를 마감하고 21
세기를 여는 역사적 시기에 탄생한 정권으로서 세기말의
시대적 민족적 사명을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한국 정치
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남기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는다”는 말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주장의 글
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니라, 위 「민족시보 제846호(1998. 3. 11)」의
논설 <김대중 정권 초대 내각의 정치적 의미>라는 글을
통해서, 새로이 구성된 내각이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성향과 의지를 가로막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다는 말을 통해, 새로이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한통련 제6차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1998년도 운동 기조

- 한통련은 지난 「민족시보 제848호(98. 4. 1)」의 지면을 통
해 1998년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의
원대회인 제6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98년도 운동기
조를 채택하였습니다.
- <3. 김대중 정권의 출범과 역사적 사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김대중 정권이 경제위기 등, 미증유의 곤란한 상
황에서의 힘든 출범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요하
게 통일정책부문 관련하여서 “주목되고 있는 김대중 정
권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흡수통합을 노골적으로 내건 전
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는 다른 융화정책으로 볼 수 있
다.”,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나 안기부 등 반통일적이며 반민주적인 법과 기구를
개폐하는 제도적 개혁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 그리고 이와 함께 정치·경제·군사·문화의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수구세력은 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면서, 하기에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그 역
사적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
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운동기조
를 수립하였습니다.
-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을 끊고
재벌을 해체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의 합리화를 촉진

하고 남북의 화해를 추진하여 대폭적인 상호군축과 군사비의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즉 탈냉전의 평화지향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대폭적인 군축을 실현하여 외국자본에 종속된 경제구조에서 탈각하여 남북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남북의 자주적인 민족경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 요컨대, 한통련은 김대중 정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그 궤를 달리함은 물론,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과정과 결과를 높이 사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구세력과의 세력관계 속에서 혹 나타날지도 모르는 개혁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과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탈냉전의 평화 지향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이를 위하여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자주적 민족경제 확립에 노력을 다할 것을 결정하는 등, 이전의 정권들과는 다른 지금의 현실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이후 활동의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와 함께 앞으로의 정부의 활동과 관점 등을 주시하며 본국의 자주와 민주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7. 한통련이 바라는 사항

- “오늘 이 나라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그리고 남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개혁이 이루어져

야” 하며 “개혁은 정치개혁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별로 신기할 것이 없는 말이지만 50년만에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새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이제는 정치가 달라질런가 보다 하고 기대를 걸어보자는 국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민중과 함께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었을 적에, 독재와 불의에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비겁한 정치은둔 생활자와 스스로를 구별하여 자기를 ‘행동하는 양심’이라 부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정보부의 해체를 주장하고 남북 민간의 교류도 허용되어야 하며 정략적으로 꾸며진 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과거 청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정치의 청산은 바로 ‘역사 바로잡기’라는 이름의 과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역대 독재정권 하에서 자의적으로 조작된 수많은 사건들이 어둠 속에 묻힌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 이 한민통·한통련 사건입니다.
- 현재 한통련은 민족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본국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통련 구성원들은 오랜 독재와의 싸움 끝에 진전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조국에 가고싶어도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등의 당국의 차가운 냉대를 받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통련이 그토록 결사적으로 구명하고자 노력해왔던 김대중씨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낄 뿐입니다.

-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당시에 김대중후보를 아직 반국가단체의 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는 한민통/한통련과 연관지어 낙선시키려했던 이른바 「한민통 관련 사진 위조 사건」이 웅변하듯이, 한민통/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판시'는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확산에 당황한 독재정권이 한민통을 파괴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음모였음이 명백합니다. 이제는 그 진상을 밝히고, 한민통/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잘못 규정해온 것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통련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본국왕래의 자유 보장을 통해 야만과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의 정치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해외에서 조국의 민주와 발전을 위하여 외롭게 노력해온 같은 민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업들을 시작으로, 해외동포들 또한 조국의 민주·평화통일과 함께 호흡하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0년 10월 19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곽동의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이덕우